

한익스프레스 참사는 기업살인이다! 진상을 규명하고 진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백승호 기자 | © 승인 2020.05.14 22:23

한익스프레스 이천 냉동창고 화재산재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충청권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4일 세종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한익스프레스 이천 냉동창고 화재산재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엄중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 운동본부 준비위원회 기자회견. © 백승호 기자

충청지역에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충청권운동본부'를 구성하기위해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난 4월 29일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 냉동창고 화재산재참사로 희생당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기자회견단. © 백승호 기자

준비위는 오늘회견을 통해 "2008년에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참사 이후에도 동일한 참사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2018년에 전면개정 된 '산업안전보건법' 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원청사와 사업주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는 법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의 법령으로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노동자 1명당 평균 432만원의 벌금처벌이 고작이라며 분노했다. 그리고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참사 당시 사업주는 벌금 50만원밖에 안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사업주들은 이러한 이유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투자나 안전을 위한 설치공정이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백승호 기자

또한 영국이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산재사망을 절반 이하로 줄였듯이 산재 사망률 1위의 대한민국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소중한 노동자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산재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되어야 하며, 오늘 참여하는 기자회견단은 중대재해기업처벌제정을 위한 총청권운동본부(준)를 구성하고 대전운동본부, 세종충남운동본부, 충북운동본부를 각 지역에 설치 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각 정당, 노동,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시키기 위한 입법발의자조직및 대시민선전전 그리고 대국회압박투쟁등 대중적 확산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벌여 갈것을 결의하기로 했다.

오늘기자회견에는 총청권 3본부(세종충남, 충북, 대전) 가맹산하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과 시민사회활동단체 그리고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발언하는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 백승호 기자



발언하는 조남덕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 시민회의 대표. © 백승호 기자



발언하는 서민식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 © 백승호 기자



결의문을 낭독하는 김민아 정의당 당원. © 백승호 기자



결의문을 낭독하는 박원중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대표. © 백승호 기자



백승호 기자 nanda6636@hanmail.net